민주당, '내란재판부' 다시 속도전… 국민의힘 "재판부 쇼핑" 정조준

與 "2심부터… 위헌 소지 없앴다"
野 "본질은 그대로… 사법권 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등의 관련법 수정안으로 '위헌 논란'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더만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법 설계에 대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김어준 유튜브'에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질질 끌거나 참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라면서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은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축구선수)메시가 흘렸한 이유는 태클을 예상해 그것마저 피해 골을 넣기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 일부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안건 상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뭐 덜어냈다고 해도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며 "판사를 미리 재판부에 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은 질렀는데 기름은 안 부었으니까 박수쳐 달라'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 목적"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합헌이 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내란 혐의의 재판이 어디 또 있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에서 두루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데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다면 위헌"이라며 "대법관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법안을 '진행 중인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칙에 담는 식으로 재정리했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기로 하고 '무작위 배당원칙' 적용을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내란법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하고, 사면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당 지도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체해병 특검) 조사에서 미진한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만 오는 28일 끝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본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는 2026년 1월 임시회 이후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김병기, 국감 전 쿠팡 오찬 논란
"해야 할 일 했을 뿐… 떳떳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의 식사 자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7일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쿠팡 대표에게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저는 필요하면 앞으로도 누구든지 만날 것이다.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 그 자료는 쿠팡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9월5일이면 제 전직 보좌직원 2명 중 1명은 쿠팡에 입용되지도 않았다"라며 "박대준(쿠팡)대표는 오히려 저와 만난 이후 제 전직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범석 회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저는 국정감사 증인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실제로 김범석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은 이슈화되지도 않은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라며 "오히려 쿠팡의 산재,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대미통상협상과 관련해 쿠팡에서 도움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 갑론을박

장예찬 "한동훈 고름 짜야"
우재준 "징계 사유 부적절"

악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해당 행위 등의 결격사유를 들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은 17일 "독립된 당무감사위원회 결과에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많은 당원들 요청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당 결정에 오래 토론해야 될 문제인가 싶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과거 한동훈씨 최측근이었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시절에는 윤리위에서 무산되긴 했지만 권영세, 이양수 두 현역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권고를 결정한 적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때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원외 당협위원장한테 2년 징계한 걸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며 "그냥 절차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범인들은 잡히면 검찰이,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히 장 부원장은 "2022년 '이준석 징계' 논란 당시 김종혁 비대위원이 '가처분'이 무차별 인용되면 정당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신청 자체를 비판하신 바 있다"며 "김종혁의 말로 김종혁씨 행동을 반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위 조사가 늦어지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시)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밤 12시에 당원 게시판을 일시 정지를 시킨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두루두루 보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 "이게 그냥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고름을 짠다'고 표현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면 지방선거 직전, 총선 다음 전 대 때 또 불거진다"며 "당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진행이 있더라도 빨리 진상 규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비유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언론에서 '궁지에 몰린 윤어게인 세력이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흔한 물타기"라고 평가하면서 "검사의 언어가 아니라 피의자의 언어인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족들이 연루된 건 1차 결과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사 한동훈이 남긴 명언, '걸리면 가야 된다'는 민주당의 많은 범죄 이력을 비판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왜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한계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에 대해 "징계 사유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다"며 "'전체주의적이다, 파시스트적이다'라는 식으로 당 대표를 비판하고 특정 종교를 사이비라고 표현한 정도인데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부원장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우 의원은 "당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 진영에서 많은 날카로운 말들을 하고 심지어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 최고위원인 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이 징계하고 그러진 않는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징계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할 거면 다 징계하고 안 할 거면 다독이는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무소불위처럼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고 따졌다.

특히 우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250개 모든 당협의 당무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당무감사위원장이)이렇게 편향된 행동을 보이면 평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당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많이 된다"며 '한 전 대표가 반발하면서 내전 얘기도 나온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고민할 때지 당이 내전으로 갈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전 대표도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지금은 당력을 모아야 할 때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당원들에게 의혹이 있는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은 지난 2024년 11월 당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건 게시되면서 촉발됐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지난 9일 비방 글 작성자가 한 전 대표 가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점화됐다. 실제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방글 게시자들과 한 전 대표를 비롯해 부인, 장모, 장인, 딸 이름이 동일했다.

이런 가운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 등의 징계 사유를 설명하면서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최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냐"며 징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국민·대중은 다 보고 있다… 업무보고 공개 이유"

李대통령, 또 이학재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질책을 돌려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대중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해당 논란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왜 그렇게 악용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외화관리를 하니까 (책갈피 달려)질문을 했는데 공항공사에 MOU 맺고 위탁했다고 하더라. 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 자기들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세관이 한다고 하더라"라며 "전 또 그런가 하다가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게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더라. 대중은 다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 보고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몇 년 전 보도되고 만달러 이상 반출 걸렸다고 보도자료도 냈다고 댓글에 나온다"라며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일부는 이걸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에게 기회주라는 거냐, 사람과 전쟁 바람피는 거 가르치는 거냐고 (방송에서)패널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의 세계와 몰상식의 세계가 공존한다. 국민과 대중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전세계에게 민주주의가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부명한 거 용인 못한다. 우리 대신하는 공직자가 왜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냐고 말은 안하지만 끊임없이 관단하고 쌓아둔다"라며 "법에 있어 공개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일종의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라고 질문했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학재 사장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진보 4당, 모든 정당 참여 정개특위 촉구

"거대 양당 독점 정개특위 반대
다양한 민의 반영 정치개혁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이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긴급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18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양당 합의는)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개혁진보 4당은 다시 한 번 거대양당에 엄중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다양한 정치 의제를 존중해 넓고 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개특위 구성은 여야 관례대로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1명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관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한·중앙亞 국회의장회의 참석
禹의장 "다층적 차원 교류 확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현지시간) 제34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 중앙아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의제인 '인간의 존엄, 사회적 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 의장의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도주의적 교류에 관한 의회 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디지털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회적 보호,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학술 및 교육 이니셔티브와 청년 교류 지원 ▲성평등과 인권 증진 ▲문화와 관광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회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대화 채널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의장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의원친선협회, 상임위원회, 의회 싱크탱크까지 다층적 차원의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국의 국경 획정 합의와 관련해 "각국 지도자와 의회의 리더십 아래 결실을 본 이번 합의는 영토 문제의 해결을 넘어 역내 신뢰와 안정에 기반한 협력 확대,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신뢰·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려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 평화'"라며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 아래 우리 의회는 입법 경험을 공유하며 자국에서 정책·제도·예산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가 간 평화와 협력만큼이나 국내 안정과 통합 역시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과 의회 책임성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카자흐스탄 예를란 코사노프 하원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